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 이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342호)

2026. 2.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2
[참고자료 1] 지역 양성평등 센터 개요(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7
[참고자료 2] 지역 양성평등센터 주요 사업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주회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5. 12. 17.
3.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성평등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6조의3(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① <u>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026년 1월 현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¹⁾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²⁾는 16개소로,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성별영

1)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성별영향평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와 지방

향평가제도에 대한 상담·자문 기능 외에도 성별 통계 관리, 여성친화 도시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기존의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양성평등 환경조성 사업³⁾을 추가하여 ‘지역양성평등센터’로 기능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로 2026년 1월 현재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중 6개소만 지역양성평등센터가 설치되었고, 이 중 광역 및 기초단위까지 포괄하는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⁴⁾는 2개소(부산, 전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양성평등센터 사업 개요 >

- (현황) 6개소 운영 중
 - 인천, 대전·세종*, 전남, 경북(2019년), 부산(2021년), 전북(2022년)
 - *경기('19년~'23년) → 대전·세종('24년~)
- (방식) 유사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양성평등센터’ 기능 확대
- (기능)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성평등 의식·문화확산사업 운영
 - 일반형(인천, 대전·세종, 전남, 경북): 광역 단위 운영
 -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정책 모니터링, 지역 청년 공감·소통 등
 - 거점형(부산, 전북):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포괄 거점 운영
 - 일반형 기능 + 거점 기능(지역 특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자료: 성평등가족부

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로 구분됨.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는 1개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가, 지역 평가센터는 2026년 1월 현재 16개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운영중에 있음.

3)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

-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주민 참여 지역 정책 모니터링 추진
- 지역 청년 공감·소통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특화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

4)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운영, 광역-기초 간 상호협력, 기초단위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거점 역할 수행

성평등가족부는 향후 일반형 양성평등센터를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로 전환하고, 거점형 양성평등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지역양성평등센터 관련 계획 >

구분	일반형 양성평등센터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주요 기능	[광역 단위 운영] ·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 지역 청년 공감·소통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확산] · 성평등 교육·문화 사업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 지역 청년 공감·소통 + · (거점기능) 지역 성평등 문화 공동포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다양화)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특화사업 추진

자료: 성평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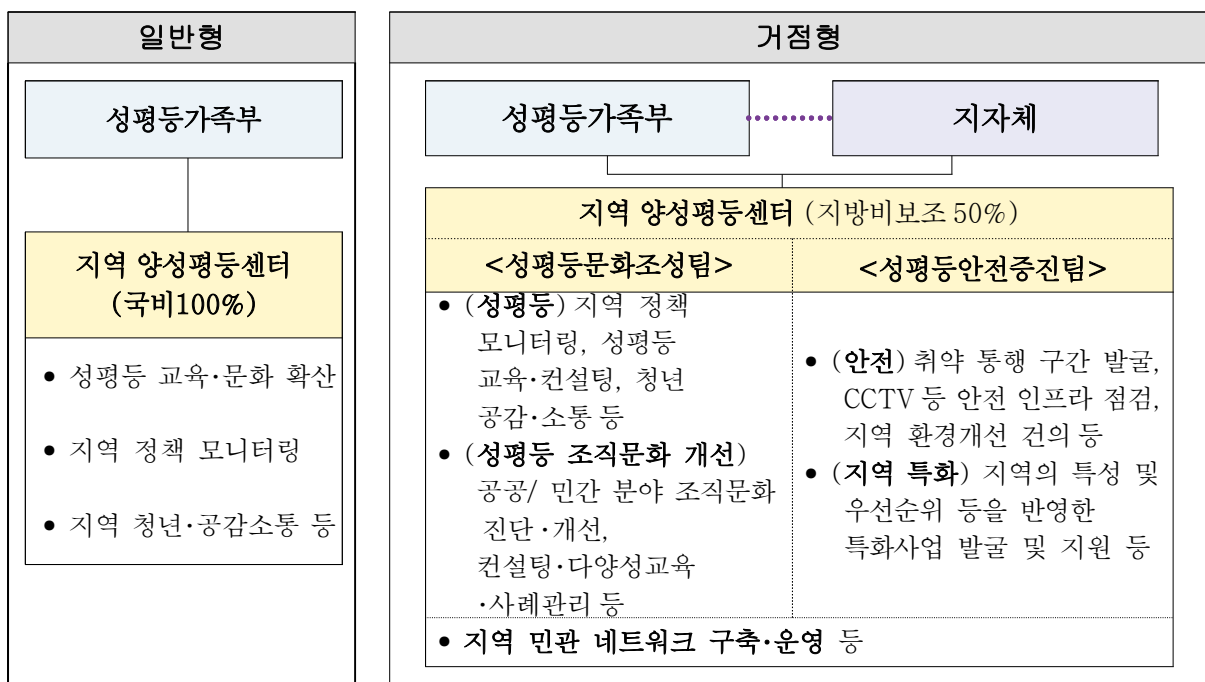
이에 개정안은 양성평등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6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지역양성평등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센터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성평등정책 추진의 실효성 제고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양성평등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

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양성평등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역 성평등센터사업(내내역사업)’ 추진체계에 따르면 지역성평등센터 중 거점형 2개소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함께 지원하고 있음(국비:지방비 = 5:5).

< 2026년도 예산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사업’ 추진체계>



자료: 성평등가족부

개정안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일상 속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고, 다만 중앙 정부 중심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체감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양성평등센터의 운영 주체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양성평등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50

【참고자료 1】 지역 양성평등 센터 개요(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 사업)

□ 개 요

- 지역 특색을 고려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성평등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일반형, 민간위탁) 2019년~, (거점형, 지자체보조) 2021년~

□ 수행기관 : 6개소(일반형(인천, 대전·세종*, 전남, 경북), 거점형(부산,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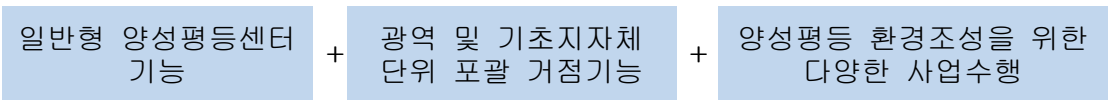
구분	일반형	거점형
지원예산('25년)	145.5백만원	352백만원
지원인력	전담인력 2명	센터장 1명, 전담인력 4명

* 경기('19년~'23년) → 대전·세종('24년~현재)

□ 일반형 양성평등센터 <광역단위 운영>

-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학생, 주부, 직장인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 추진으로 성평등 문화·의식 형성
 - * 도서지역 및 특수학교 청소년·교사, 공공서비스 전달기관 종사자 등
-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지역 주민이 직접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역 정책을 평가·모니터링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후 개선사항 발굴·제안
 - * 주부, 지역 시민 활동가 등 다양한 참여자 대상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지역 청년 공감·소통) 지역 정주환경, 일·생활 균형, 성평등 조직문화 등에 대한 청년 간 소통 기회 마련

□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확산>



- (거점기능)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공동포럼 등 구성·운영, 기초 단위까지 확산된 다양한 분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다양화)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개선 및 이행 등 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성평등 지역 특화 사업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2026)

【참고자료 2】 지역 양성평등센터 주요 사업

○ 지역 양성평등센터(6개소)를 통해 ①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②성평등 정책 모니터링, ③청년 공감·소통, ④지역 특화사업 등 생활밀착형 정책 지원

지역명	2025년 주요 성과
인천	① (성평등 교육·문화) 도서·벽지 중학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지원(교육청 연계) ② (정책 모니터링) 인천둘레길 16코스 관광콘텐츠 모니터링·의제 발굴 및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인천 청년 1인 주거·안전 관련 정책 제안 및 논의
대전·세종	① (성평등 교육·문화) 마을공동체, 지역리더, 공공기관 등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② (정책 모니터링) 대전·세종 청년조례·생활체육시설 모니터링·의제 발굴 및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성별고정관념 등 간호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평등한 일터를 위한 제안
전남	① (성평등 교육·문화) 청년, 대학생, 농·어업인 등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강사양성 등 ② (정책 모니터링) 전남 가족정책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워라벨을 키워드로 대학 선·후배 대화의 장 마련
경북	① (성평등 교육·문화) 교육청·유치원·어린이집 연계 양성평등교육 역량강화 교육 ② (정책 모니터링) 도내 중소기업 대상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③ (청년 공감·소통) 경북 남성 청년 대상 육아휴직 및 돌봄 등 애로사항, 인식차이 등 논의
부산	① (성평등 교육·문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맞춤형 교육 및 공공기관 찾아가는 교육 ② (정책 모니터링)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청년 공간 등 지역 정책 및 공간 모니터링 ③ (청년 공감·소통) 양성평등 정주환경 및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청년 토크콘서트 추진 ④ (지역특화사업) 지역정책모니터링 연계 우수공간(7곳) 선정 “양성평등도시, 부산” 홍보
전북	① (성평등 교육·문화) 초·중학교 양성평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② (정책 모니터링) 골목길 보행자 안전 모니터링 및 성평등한 지역 환경 개선안 도출 ③ (청년 공감·소통) 결혼이주배경, 귀농귀촌청년 등 성평등한 일터와 지역공동체 간담회 ④ (지역특화사업) 근현대사 전북 여성 생애구술사, 전북 양성평등 영화제 등

자료: 성평등가족부(2026)